

‘희망 나눔’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탑 시작

광주 50억7000만원 · 전남 105억5000만원 목표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함을 전할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탑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5·18민주광장에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서는 성금 첫 기부, 차량 및 기타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온도 올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버블 점등 이벤트를 마련, 성공적인 캠페인을 기원했다.

첫 기부는 ㈜광주은행·기아오도랜드·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나눔테크·정원장학복지재단 등 5개 기업·기관이 이름을 올려 돌봄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광주를 가치있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의 목표액은 50억

7000만 원이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문제 대응 지원, 안전한 일상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사용한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99억2000만원)보다 6% 늘어난 105억5000만원이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문제 대응, 안전한 일상, 사회적 돌봄, 교육 및 역량강화 등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가 전하는 마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민 10명 중 9명 “교권침해 심각”

“인성교육 소홀 때문”...광주시의회 설문

광주지역 시민 10명 중 9명은 교권침해가 심각하며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시민 700명 중 651명(93%)은 ‘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225명(32.1%)이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을 지목했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인권에 치중’ 165명(23.6%), ‘자녀 과잉보호’ 164명(23.4%), ‘법적 제도의 미비’ 143명(20.4%) 순이다.

가장 큰 문제인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334명(44.7%)이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을 제시했으며 ‘학생들의 폭언과 수업방해’ 281명(40.1%), ‘언론 등의 지나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50명(7.1%)이 응답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하는 조치로는 243명(34.7%)이 ‘교권침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 등의 법률지원’을 제시했다.

또 ‘가정 훈육 등을 위한 격리조치’에 응답한 시민은 207명(29.65)이었으며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조치’ 162명(23.1%), ‘교사 휴식 및 병원진료 지원’ 75명(10.7%)이다.

교권침해 학생이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637명(91%)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63명(9%)이다.

교권 침해 추가 처분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및 심리치료’가 248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 전학’ 182명(28.6%), ‘출석정지’ 108명(17%), ‘학교방사활동’ 74명(11.6%), 학급교체 13명(2%) 순이다.

/조선주 기자



광주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

지난 1일 오전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강기정 시장, 정무찬 시의회 의장, 이점선 시교육감,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참석자들이 사랑의 온도탑 온도 올리기 점등식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미래차 선도도시’ 날개 달았다

그린카진흥원, 전자기적합성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완성차 전자파 유해 평가기관 인정...세계 공신력 확보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하는 전자기적합성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이 국가기술표준인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완성차 전자기적합성(전자파 유해간섭 환경)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전자기적합성 평가는 전기·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이 전자파에 의해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환경에 유해한 간섭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자동차 분야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은 전기자동차의 증가와 자율주행차량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 속 완성차의 주행과 충전 중 안정성에 대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세계 104개국으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친환경자동차 전자기적합성 시험실은 국내 최대 규모로 전장 20m 굴절버스의 시험도 가능한 실험실(챔버)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초로 전자파 발생 수신장치 세 방향으로 상부에 매달아 조정이 가능하며, 바닥에는 노면과 동일한 주행 모의시험설비를 갖춘 차

량의 자율주행센터 동작과 차량의 전자기적합성 시험이 가능하다.

전자기적합성 전용 충전모의장치를 연동, 국내·외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에 대한 충전 안전성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인증 시설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타 지역에서 인증을 진행했던 지역 완성차 및 부품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개발기간 단축,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승 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완성차와 해당 부품까지 전 영역에서 전자기적합성 분야 신뢰성을 확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자동차 안전성과 기술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비엔날레전시관 문화공간으로 2면

광주 Y프로젝트예산 일부 삭감 3면

한국, 행복수준 하위권 4면

알림

본보 지역 주재기자 모집

▶모집분야

여주시, 나주시, 무안군

호남매일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일동